쟁점분석 20-01

2020 미국 대통령 후보 재정/조세 선거공약 비용 비교

<트럼프(공화당) VS 바이든(민주당)>

2020.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연구진

- (총괄) 윤성주 재정지출분석센터장
- (재정) 구윤모 선임연구원
- (조세) 장준희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Ⅰ. 개요 ····· 1

Ⅱ. 트럼프 후보 공약 비용 ····· 3

1. 재정 정책 ····· 4

2. 조세 정책 ····· 9

Ⅲ. 바이든 후보 공약 비용 ····· 11

1. 재정 정책 ····· 12

2. 조세 정책 ····· 20

Ⅰ. 개요

[요약]

※ 양당 대선후보의 재정/조세 정책비용 전망은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요약 작성하였음

※ CRFB의 원문 결과 자료는 미의회예산처(CBO), 세금정책센터(TPC), 각 대선후보 캠페인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

※ 각 후보의 공약 비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중위값(central estimates) 기준으로 작성

□ 트럼프는 세금 인하, 군대 강화, 인프라 지출 증가, 약가(drug prices) 인하, 퇴역군인 관련 지출 증가, 학교 및 보건 서비스 선택 확대, 이민 관련 지출 감소 등을 주요 정책으로 발표

○ 트럼프 선거 캠페인에서 제시한 공약을 근거로 한 총 정책비용은 향후 10년 동안 4.95조달러 전망

- 이에 따라 연방 채무는 동 기간 동안 GDP대비 125% 수준으로 상승 전망

□ 바이든은 보육/교육 지출 증가, 은퇴 및 장애연금 확대, 기후 변화 대응, 전쟁 종식, 고소득자/고소득 기업 세금 증가 등을 주요 정책으로 거론

○ 바이든 선거 캠페인에서 제시한 공약을 근거로 한 총 정책비용은 향후 10년 동안 5.6조달러 전망

- 이에 따라 연방 채무는 동 기간 동안 GDP대비 12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바이든의 총 정책비용(중위값 기준)은 트럼프의 총 정책비용보다 0.65조달러 더 크게 나타남(약 1.1배)

○ 하지만, 트럼프는 1.7조달러 감세를 공약한 반면, 바이든은 4.3조달러 증세를 공약해 두 후보 간 조세 정책 비용 차이가 지출 정책 비용 차이의 대부분을 상쇄

□ 두 후보 모두 인프라 및 기타 국내 지출이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이든의 공약이 4.45조달러로 트럼프의 공약보다 1.75조달러 더 큰 수치를 보이고 있음(약 1.6배)

○ 보건 및 장기요양 정책의 경우 트럼프는 지출을 절감하는 반면, 바이든은 지출을 확대

○ 국가 안보 및 이민 정책의 경우 트럼프는 지출을 확대하는 반면, 바이든은 지출을 절감

<표 1> 미 대선후보 정책 공약 비용(중위값) 비교

(마이너스 표시는 비용 규모; 부호가 없는 수치는 절감 규모)

구분	트럼프	바이든
보육 및 교육	-$0.15조	-$2.70조
보건 및 장기요양	$0.15조	-$2.05조
사회보장/보충적 소득보조/은퇴	N/A	-$1.15조
인프라 및 기타 국내 지출	-$2.70조	-$4.45조
국가 안보 및 이민	-$0.30조	$0.75조
순이자 지출	-$0.25조	-$0.30조
조세 정책	-$1.70조	$4.30조
총 정책비용(Net Deficit Effect)	**-$4.95조**	**-$5.60조**

주: 재정지출축소(+), 재정지출확대(-), 증세(+), 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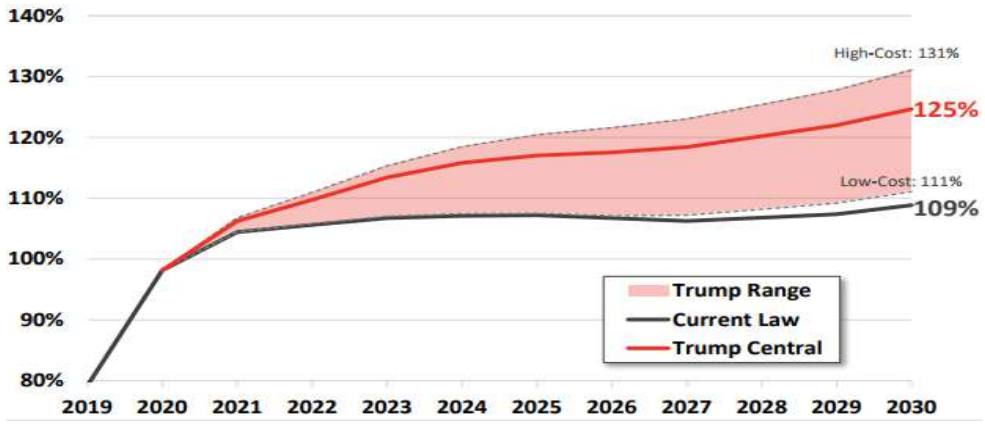
출처: CRFB, 'The Cost of the Trump and Biden Campaign Plans', 2020.10.7.

□ 트럼프(Trump) 대통령의 대선공약 비용은 향후 10년간 최저 비용 7,000억달러 ~ 최고 비용 6.85조달러로 추정

○ 이에 따라 연방 채무는 동 기간 동안 GDP대비 최저 111% ~ 최고 13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그림 1] 트럼프 대통령 공약에 따른 채무 추이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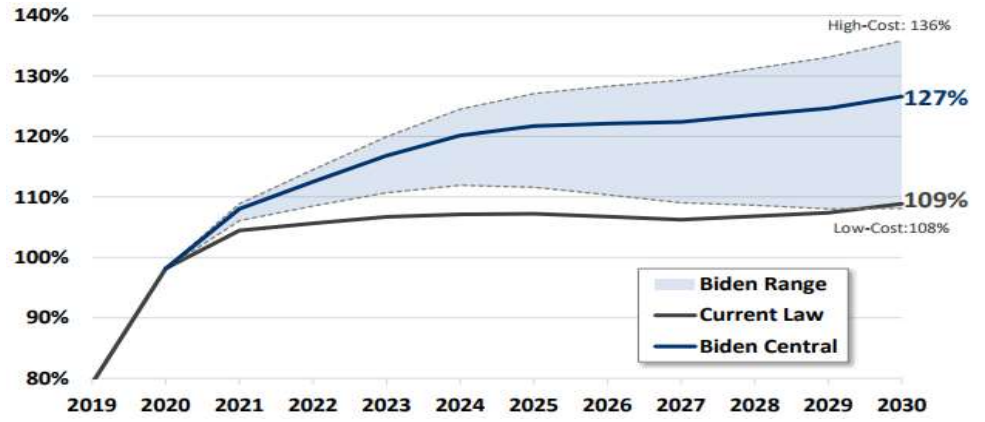
출처: CRFB, The Cost of the Trump and Biden Campaign Plans, 2020.10.7. Fig, 6.

□ 바이든(Biden)의 대선공약 비용은 향후 10년간 최저 비용은 1,500억달러가 절감되며, 최고 비용은 8.3조달러로 추정

○ 이에 따라 연방 채무는 동 기간 동안 GDP대비 최저 108% ~ 최고 13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그림 2] 바이든 후보 공약에 따른 채무 추이

(단위: GDP 대비 %)



출처: CRFB, The Cost of the Trump and Biden Campaign Plans, 2020.10.7. Fig, 8.

※ CBO는 각 후보들의 정책에 관계없이, 현 법률이 유지/지속됨을 가정으로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GDP 대비 채무가 2019년 79%에서 2030년 10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Ⅱ. 트럼프 후보 공약 비용

<표 2> 트럼프 후보 정책별 공약 비용

(마이너스 표시는 비용 규모; 부호가 없는 수치는 절감 규모) (단위: 억달러)

공약 내용	저위 (Low)	중위 (Central)	고위 (High)
• 보육 및 교육			
광범위한 학교선택 지원	-500	-500	-500
보육세액 공제 및 양질의 유치원 교육	0	-1,000	-1,500
소계(Subtotal)	-500	-1,500	-2,000
• 보건			
처방약가 인하	1,500	1,500	1,500
보건시스템 개혁	8,500	0	0
소계(Subtotal)	10,000	1,500	1,500
• 기타 국내 지출			
인프라 지출 확대	-3,000	-2,000	-2,000
우주 주도권 확대	-4,000	-6,500	-9,000
흑인소유 기업 지원(직업교육 포함)	-500	-500	-500
소계(Subtotal)	-7,500	-27,000	-29,500
• 국가안보 및 이민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국방	-2,000	-5,000	-6,500
전쟁종식 및 미군철수	7,500	5,500	5,000
퇴역군인 예산 확대	-1,000	-4,000	-4,000
불법이민 조치	1,000	500	0
소계(Subtotal)	5,500	-3,000	-5,500
• 조세 정책			
개인 소득세 인하	-12,500	-12,500	-24,500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세액 공제	0	-500	-1,000
기회특구(Opportunity Zones) 확대	-500	-500	-500
필수산업 비용 전액(100%) 공제	-1,000	-3,500	-3,500
소계(Subtotal)	-14,000	-17,000	-29,500
순이자 지출	-500	-2,500	-3,500
총 비용(Total Deficit Impact)	**-7,000**	**-49,500**	**-68,500**

자료: CRFB, 'The Cost of Trump and Biden Campaign Plans', 2020.10

1. 재정 정책

가. 보육(child care) 및 교육

◇ 트럼프 대통령의 보육 및 교육 관련 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약 1,500억달러 소요 전망(최소 $500억 ~ 최대 $2,000억)

□ 학교 선택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500억달러 소요 전망)

○ 부모가 자녀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 연방 공립교육 재원을 통해 사립학교 선택에 대한 지원

- 이와 관련하여, 사립 초·중·고 교육과정 장학금 기관(SGO, Scholarship Granting Organizations)에 기부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Education Freedom Scholarships tax credit) 부여

* 동 세액공제 규모는, 연간 50억달러의 예산 한도가 있기에 향후 10년간 5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 보육세액 공제를 통한 양질의 유치원(pre-school) 교육 제공(1,000억달러 소요 전망)

○ 흑인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플래티넘 계획(Platinum Plan)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동 정책은 보육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양질의 유치원 교육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트럼프의 플래티넘 계획은 ①기회 ②안보 ③번영 ④공정을 표방하고 있으며, 향후 4년간 양질의 교육 및 직업 교육을 포함하여 흑인 지역사회를 위해 일자리 창출(300만명), 차별화된 보건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나. 보건 정책

◇ 트럼프 대통령의 보건 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약 1,500억달러 절감 전망

□ 처방약가 인하(1,500억달러 절감 전망)

○ 보험제휴병원(in-network facilities)에서 비협약병원(out-of-network)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행태를 종식하고자 하며, 메이케어 Part D(처방약 지원) 수가(formula) 개혁 및 약제비 상한가를 통해 처방약 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을 제한

○ 추가적으로, 약가 인하 방안으로 캐나다로부터 안전한 약품 수입 승인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

□ 보건 시스템 개혁(추가 소요 비용 없음, 최대 8,500억달러 절감)

○ 보건개혁을 통해 보험료 인하 및 모든 기저질환 지원

○ 구체적인 정책 방법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2021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에서 언급된 보건개혁비전(vision for health reform)에 근거할 경우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과 메디케이드로부터 발생하는 지출을 약 8,500억달러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21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의 기준선 전망에 따르면, 메디케이드의 올해(FY2021) 지출규모는 4,520억달러로 전체 의무지출(이자지출 제외)에서 약 15%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다. 인프라, 환경, 기타 국내 지출

◇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및 기타 국내 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2.7조달러 소요 전망(최소 $7,500억 ~ 최대 $2조 9,500억)

□ 인프라 지출 확대(2조달러 소요 전망)

○ 트럼프 캠페인은 "세계 최대 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5G 경쟁 승리"를 발표하였으며, '가장 깨끗한 식수와 공기"에 대한 세계 선두자리를 지속하고자 함

○ 또한, 흑인 지역사회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200억달러 규모의 고속 데이터 통신망(broadband) 인터넷 투자 계획을 제안함

○ 인프라 지출 역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상태는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나 트위터 등에서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남

□ 우주 주도권 확대(6,500억달러 소요 전망)

○ 최근 신설된 우주군(Space Force) 강화를 통해 달 표면에서의 영속적 주둔과 함께 유인(manned mission) 화성 탐사 계획

- 신규 군 부대인 우주군에 대한 비용은 2021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에 따르면, 약 1,5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공군 휘하부대로서의 우주군에 대한 창설 계획은 2020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음)
- 달 및 화성 미션 관련 비용에 대한 사항은 불확실한 측면이 크며, 관련 예산은 최소 2,500억달러~최대 7,500억달러 소요될 것으로 추정

□ 흑인 소유 기업 및 직업 교육 지원(500억달러 소요 전망)

○ 약 400억달러를 투자하여 흑인소유의 도급업체 및 금융서비스 기관 확대 및 사모펀드 투자 자금을 증가시킬 계획 (동 정책도 앞서 "가. 보육 및 교육" 부분에서 언급한 플래티넘 계획의 일환임)

○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Pell Grants)과 견습 제도(apprenticeship)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흑인 노동자들의 교육/재교육(retraining)을 지원할 계획

라. 국가안보 및 이민 정책

◇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및 이민 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3,000억달러 소요 전망(비용 절감 규모: 5,500억달러 전망 ~ 최대 $5,500억 비용 전망)

□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국방(5,000억달러 소요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은 ①미국 군사력 유지·확대, ②미국 시민을 위협하는 국제 테러조직 제거, ③동맹국들의 공정한 비용 배분, ④사이버안보 국방시스템 및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을 주요 안보 원칙으로 삼고 있음

* 위에 언급된 정책 원칙들은 2021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과도 일치함

- 트럼프 대통령은 재량지출 한도가 만료된 후에는 국방예산을 매년 500~600억달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종합한 향후 10년 동안의 중위 값은 약 5,000억달러로 전망

- 국방부의 미래연도 국방 프로그램(FYDP, Future Years Defense Program)이 모두 진행될 것을 가정할 경우, 최대 비용은 6,5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미 국방부는 대부분 매 해 향후 5개년에 대한 미래 국방 계획서를 발표하고 있음

□ 전쟁 종식 및 미군 철수 (5,500억달러 절감 전망)

❍ "끝없는 전쟁 종식 및 군대 복귀"를 제안한 트럼프 캠페인은 향후 중동지역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주둔을 종식 또는 제한할 것으로 보임

- 이를 통해 매년 800억달러 규모로 지출되었던 해외비상작전(OCO,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비용 감축 전망

□ 퇴역군인 예산 확대(4,000억달러 소요 전망)

❍ 보건 분야를 필두로 한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함. 정부가 지정한 공공보건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건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 한편, 의회는 2014년 이래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 분야 서비스의 유용성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

□ 불법 이민 조치(500억달러 소요 전망)

❍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 종식, 미등록 이민자들(undocumented immigrants)의 정부 특정 혜택 차단 등 불법 이민과 관련한 몇몇 정책들을 제안함

❍ 세액 공제를 위한 사회보장번호 제출 의무 및 메디케이드 혜택을 위한 정식 이민자 서류 제출 등 수혜자 검증을 강화할 계획

2. 조세 정책

◇ 트럼프 대통령의 조세 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수입을 1.7조달러 감소시킬 전망 (최소 $1.4조 ~ 최대 $2.95조)

□ 개인소득세 인하(수입 1.25조달러 감소)

❍ 트럼프 캠프는 "세후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구체적인 정보는 부재

❍ 적어도 FY2021 예산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2025년 만료되는 감세 및 일자리법(TCJA; Tax Cuts and Jobs Act, 2017) 연장을 지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TCJA의 영구적 연장에 10년간 약 1.25조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낮은 개인소득세 유지, 표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확대,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및 부동산세 축소 등이 포함됨
- 단, 인적공제는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및 주·지방세 공제는 제한

□ Made in America(수입 500억달러 감소)

❍ 중국으로부터 일자리를 가져오기 위해 기업들에 'Made in America' 세액 공제와 세제 혜택을 공약

❍ 정책 세부 내용이 없어, 해외발생무형자산소득(FDII) 공제가 현 수준에서 2025년 이후까지 연장된다고 가정

□ 기회 특구 확대(수입 500억달러 감소)

❍ 기회 특구(Opportunity Zones)에서는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유예된 세금은 2026년 말까지 납부되어야 하나 2030년까지 연장한다는 가정하에 10년간 500억달러가 추가 소요될 전망

□ 제약, 로봇공학 등 필수 산업에 대한 비용 전액 공제 확대(수입 3,500억달러 감

소)

❍ 제약, 로봇공학 등 핵심 제조업 기업들이 미국으로 복귀할 경우 비용을 전액 공제해 투자를 촉진

❍ 정책 세부 내용이 거의 제시되지 않았지만, 현 정책을 연장할 것으로 가정

Ⅲ. 바이든 후보 공약 비용

<표 2> 바이든 후보 정책별 공약 비용

(마이너스 표시는 비용 규모; 부호가 없는 수치는 절감 규모) (단위: 억달러)

공약 내용	저위 (Low)	중위 (Central)	고위 (High)
• 보육 및 교육			
보육 및 보편적 유아 교육 지원	-3,000	-5,000	-7,500
초·중·고(K-12) 교육예산 확대	-6,000	-6,000	-6,000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지출 확대	-15,000	-16,000	-17,000
소계(Subtotal)	-24,000	-27,000	-30,500
• 보건 및 장기요양			
건강보험 범위 확대	-17,000	-19,000	-21,000
노인 돌봄(elder care) 및 장기요양 지원	-6,000	-6,000	-6,500
농업 지역의 보건, 정신 건강 및 마약성 진통제 남용 관련 예산	-3,000	-3,000	-3,000
보건비용 감축	13,000	4,500	3,500
세수 환류(revenue feedback) 효과	3,000	3,000	3,000
소계(Subtotal)	-10,000	-20,500	-24,000
• 사회보장, 보충적 소득 보장(SSI)및 은퇴			
사회보장제도 확대	-4,000	-4,000	-4,000
보충적 소득보장 확대	-5,500	-7,000	-8,000
노령자 세금 우대 확대	0	-500	-1,000
소계(Subtotal)	-9,500	-11,500	-13,000
• 인프라, 환경 및 기타 국내 지출			
그린 인프라 및 미국 혁신 투자	-20,000	-30,000	-40,000
적정 가격의 주택 확대	-3,500	-7,500	-7,500
보편적 유급 휴가 지원	-5,500	-5,500	-5,500
기타 국내 지출	-1,000	-1,500	-2,000
소계(Subtotal)	-30,000	-44,500	-55,000
• 국가안보 및 이민			
아프가니스탄, 중동 지역 전쟁 종식	7,500	5,500	5,000
이민 개혁	2,000	2,000	2,000
소계(Subtotal)	9,500	7,500	7,000
• 조세 정책			
법인세 인상	19,500	18,000	15,000
개인소비세 인상	23,000	14,000	12,000
사회보장급여세 상한 인상	10,000	9,000	8,000
대형은행 금융위험수수료 도입	3,500	1,000	1,000
납세협력(Tax Compliance) 개선	10,000	1,000	500
소계(Subtotal)	66,000	43,000	36,500
순이자 지출	-500	-3,000	-4,000
총 비용(Total Deficit Impact)	**1,500**	**-56,000**	**-83,000**

자료: CRFB, 'The Cost of Trump and Biden Campaign Plans', 2020.10

1. 재정 정책

가. 보육(child care) 및 교육

◇ 바이든 후보의 보육 및 교육 관련 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약 2.7조달러 소요 전망(최소 $2.4조 ~ 최대 $3.05조)

□ 보육 및 보편적 유아 교육 지원(5,000억달러 소요 전망)

❍ 중산층을 위한 경제 회복 및 일자리 창출 비젼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아젠다 하에 저렴한 가격의 광범위한 보육 서비스 이용 확대

- 모든 3세, 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 지원 확대(이를 위해 주정부, 공립학교, 보육센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기타 관련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혼합 서비스 전달체계 구상)
-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를 확대하여 최대 절반규모(유아자녀 1명당 8천달러, 다자녀는 최대 1만 6천달러)의 양육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중위소득 구간의 1.5배 소득 미만자들을 대상으로 보육비용이 수입의 7%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조금 차등제도 시행

□ 초·중·고(K-12) 교육예산 확대(6,000억달러 소요 전망)

❍ 저소득층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교육위원회(School Board) 및 공립학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타이틀 원(Title Ⅰ[1]) 예산 3배 확대(모든 학교의 교사 급여 인상 및 엄격한 교육과정 제공 포함)

❍ 장애인 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의 대상자인 장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공립학교에 추가 예산 지원

❍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Pell Grants)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생의 대학교 과정 지원(고등학교, 전문대, 고용주, 생활지도 카운슬러 등과 협력 체계 구축)

1) Title Ⅰ: Financial Assistance to local educational agencies for the education of children of low-income families

□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지출 확대(1조 6,000억 달러 소요 전망)

❍ 고등교육에 대한 자기부담비용 감축을 위해 다수의 정책 제시

- 공립대학교 등록금 지원(public colleges and universities tuition-free for all families with incomes below $125,000)
- 최대 2년 동안 전문대학(community colleges) 또는 양질의 직업 훈련 학비 지원
- 흑인 지역사회의 교육 신장을 위해 설립된 대학(HBCUs,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인디안 부족대학(TCUs, Tribal Colleges and Universities), 소수민족 교육기관(MSIs, Minority-Serving Institutions[2]) 등에 750억달러 예산 지원
- 인력양성(workforce training) 프로그램 개발에 500억달러, 전문대학 시설의 보건·안전 개선을 위해 80억달러 계획
- 펠 그랜트(Pell Grants) 장학금 규모 및 자격 대상 확대

❍ 2년, 4년제 공립대학(또는 private HBCUs, TCUs, MSIs도 포함)의 등록금 관련 채무 지원 등 학생 채무 완화

- 또한, 2만 5천달러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채무 상환을 소득의 5%로 제한하며, 20년 후에는 잔존 채무 자동 탕감

2) Minority-Serving Institutions는 1965년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of 1965)에 의해 연방 공식 학교로 규정되어 있으며, 하위범주로는 흑인 대학(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히스패닉 기관(Hispanic Serving Institution), 부족대학(Tribal College and Universities), 알래스카 원주민 또는 하와이 원주민 기관(Alaska Native or Native Hawaiian Serving Institution), 아시아계 미국인 및 아메리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 기관(Asian American and Native American Pacific Islander Serving Institution)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7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DHS, US Coast Guard, Office of Diversity and Inclusion)

나. 보건 및 장기요양

◇ 바이든 후보의 보건 및 장기요양 관련 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약 2.05조 달러 소요 전망(최소 $1조 ~ 최대 $2.4조)

□ 건강보험 범위 확대(1조 9,000억 달러 소요 전망)

* 건강보험 범위 확대와 관련한 정책의 모든 세부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음

❍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조금을 확대하여, 보험이 필요한(lack insurance) 수요자들 및 오바마케어의 메디케이드 확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주의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무료의 신규 공공 의료보험 옵션(public option) 설치

❍ 현재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대상) 정책의 기존 방향은 유지하되, 메디케어(고령자 대상) 수혜 자격 연령은 현 65세 → 60세로 하향 조정

□ 노인 돌봄(elder care) 및 장기요양 지원(6,000억 달러 소요 전망)

❍ "Build Back Better" 비젼 하에 노인 장기 요양의 질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제시

- 메디케어 하에서 받는 지역 보건시설 이용(community care) 및 자택 간호 서비스의 대기시간을 없애고, 장기요양 서비스 혁신 펀드(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Innovation Fund)를 조성할 계획
- 장기요양 전문 인원 수 및 교육 확대
- 가정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신설 및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행 세금우대조치 확대

□ 농업 지역의 보건, 정신 건강(mental health) 및 마약성 진통제 남용 관련 예산 확대(3,000억 달러 소요 전망)

❍ 농업지역의 의료 접근성 확대 및 지원을 위해 지역 보건 센터 예산 2배 증가

❍ 정신건강평등법(mental health parity laws) 이행 개선과 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 예산

확대

❍ 추가적으로, 1,250억달러 규모의 마약성 진통제 남용 문제 조치를 위한 예산(주 보조금 750억달러 포함)을 계획하고 있음

□ 보건비용 감축(4,500억 달러 절감 전망)

❍ 연방정부의 처방약 가격 및 기타 관련 지출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정책 방안의 핵심은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측이 직접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금지한 법을 폐지하고, 협상 권한 부여

❍ 시장에서 독점 형식으로 판매되는 신규 약품 및 생물의약품(biologics)의 경우, 여러 국가들의 평균 가액을 바탕으로 적정한(reasonable)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독립 기구 설치

- 독립기구를 통해 책정된 가격은 메디케어와 건강보험에서의 공공 옵션(public option) 및 민간 보험 시장에도 적용할 계획

❍ 유명 처방약 등의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반의약품(generic drugs)의 가속 개발과 함께 도입 경쟁도 촉진

다. 사회보장, 보충적 소득 보장(SSI[3]) 및 은퇴

◇ 바이든 후보의 사회보장, 보충적 소득 보장 및 은퇴 관련 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약 1.15조 달러 소요 전망(최소 $9,500억 ~ 최대 $1.3조)

□ 사회보장제도 확대(4,000억 달러 소요 전망)

❍ 사회보장 지급(수혜)액의 최저한도를 연방 빈곤선(FPL, Federal Poverty Level)의 125%로 설정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최소 20년간 받은 경우 지급액을 5% 인상하여 지급(유족 배우자 연금 지급 규모도 인상 계획)

- 또한, 중복 급여 금지 조항(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을 폐지하여 근로자 및 유가족의 사회보장연금 및 기타 연금 중복 혜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 장애연금(SSDI,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의 경우 장애발생 후 5개월간의 연금수급 대기 기간(waiting period) 폐지와 함께 가입 소득 상한 요건(현재 월 $1,170)을 인상하면서, 혜택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단계적 방안 마련 계획

□ 보충적 소득보장 확대(7,000억 달러 절감 전망)

❍ 보충적 소득보장 급여 혜택의 최저한도를 연방빈곤선의 100% 수준(현재는 2/3 수준)으로 인상하며, 불필요한 요건 항목 등 폐지

- 바이든 캠프의 구체적인 혜택 책정 방식은 나오지 않았으나 연방 빈곤선의 100%에 도달하기 위해 월 평균 수혜 금액(약 600달러)의 80%가 인상되어야 함

□ 고령자 세금 우대 확대(500억 달러 소요 전망)

❍ 세법 개정을 통해 은퇴 수입 개선

- 직장인 연금 등을 갖추지 못한 직장인의 대다수를 대상으로 직장인 연금 자동등록을 시행하고, 근로자에게 은퇴 저축을 제공하는 소기업에 세액 공제
- 근로장려세제(EITC)를 65세 이상 무자녀 근로자(childless workers)를 대상으로 확대

3)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저소득층, 또는 근로능력 상실자에 해당하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보조제도 (김태현 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요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라. 인프라, 환경 및 기타 국내 지출

◇ 바이든 후보의 인프라, 환경 및 기타 국내 지출 관련 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약 4.45조 달러 소요 전망(최소 $3조 ~ 최대 $5.5조)

□ 그린 인프라 및 미국 혁신 투자(3조 달러 소요 전망)

❍ 바이든 "Build Back Better" 아젠다에 따르면 2035년까지 100% 클린 에너지 달성 계획(동 계획은 향후 4년 동안 약 2조달러 규모의 지출이 전망됨)

❍ 한편,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슬로건에서는 향후 4년 동안 3,000억달러 규모의 획기적인 기술개발(전기차, 인공지능 시스템,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등)을 촉진할 계획

❍ 추가적으로, 향후 4년 동안 국내 노동자 생산 제품에 대한 연방 조달지출에 4,000억달러 지출 계획

❍ 바이든 캠페인은 다수의 환경, 클린 에너지 등에 관한 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음

* 아래에 언급된 정책안은 바이든의 최근 정책인 "Build Back Better"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함

- 클린 에너지 혁명 및 환경 정의 계획(the Biden Plan for a Clean Energy Revolution and Environmental Justice)에 따르면, 늦어도 2050년까지 100% 클린 에너지 경제 및 탄소배출량 순제로(net-zero emissions) 달성 목표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1.7조 달러 투자 계획

* 동 계획은 수자원 · 교통 · 에너지 인프라 시스템의 수리 및 현대화, 오염 감축 및 환경 보호를 추진함과 동시에 전국적인 클린 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자 함

- 또한, 중산층 경쟁력 투자 계획(the Biden Plan to Invest in Middle Class Competitiveness)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1.3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진행

*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에는 3,000억달러 규모의 주택 건설과 1,000억달러 규모의 교육 관련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적정 가격의 주택(affordable housing) 확대(7,500억달러 소요 전망)

❍ 주거 임대비용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공공 주택 바우처(section 8 public housing vouchers) 제도 확대

❍ 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00달러의 세액 공제 ② 저소득층의 주택 비용을 부담하는 신규 임차인 공제 제도 도입으로 인해 매해 약 50억달러 지출 전망

※ 주택 바우처 제도 자체만으로도 약 4,500억달러 비용이 전망되며, 주택 지원 관련 위의 2가지 종류의 세액공제 규모는 약 3,000억달러로 추정됨(총 $7,500억)

□ 보편적 유급 휴가 지원(5,500억달러 소요 전망)

❍ 본인이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 직계 가족 구성원이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출생 입양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가족 구성원의 해외 파병으로 인해 비상상황(qualifying emergency)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유급병가 최대 12주 제공

- 급여 혜택은 최근 3년간 수혜자의 가장 높았던 임금의 약 2/3 수준(월 최소 $580, 최대 $4,000)으로 함

□ 기타 국내 지출(1,500억달러 소요 전망)

❍ 노동조합 및 노동자 권한 강화를 위해 약 500억달러 지원

❍ 이 외에 형사 사법 개혁 300억달러, 농업지역 지원에 200억달러 계획

마. 국가 안보 및 이민

◇ 바이든 후보의 국방 및 이민 관련 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약 7,500억 달러 절감 전망(최소 $7,000억 ~ 최대 $9,500억)

□ 아프가니스탄, 중동 지역 전쟁 종식(5,500억달러 절감 전망)

❍ 아프가니스탄 및 중동지역 등의 끝없는 전쟁(forever wars)을 종식하며, 전 세계 군사 분쟁지역에서의 미군의 군사 활동 축소하는 한편 알카에다(Al-Qaeda)와 이슬람 급진세력(Islamic State)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동 정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으나, 매해 해외비상작전(OCO)으로 지출되는 800억달러 규모의 지출이 감축될 것으로 보임

□ 이민 개혁(2,000억달러 절감 전망)

❍ 남부지역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 및 특정 무슬림 국가들의 난민/여행 금지 철회, 미국 이민 관련 규칙(public charge rule) 수정,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 Arrivals) 축소 중단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세운 이민 관련 대부분의 정책을 되돌릴(undo)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①이민자 수 증가 ②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undocumented) 이민자들의 시민권 획득 방안 마련 ③고숙련 노동자 및 농업종사자 비자 발급 ④비자 관련 국가할당 폐지 ⑤연간 난민 유입 한도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된 이민 개혁 입법 시도 전망

❍ 위에 언급된 이민 관련 입법은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이었을 당시 지원한 2013 이민 패키지법인 '국경안보/경제기회/이민 현대화법*'과 비슷한 방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법안 원문 명칭: Border Security, Economic Opportunity and Immigration Modernization Act(S.744) → 113대 의회(2013~2014년)에서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함

2. 조세 정책

◇ 바이든 후보의 조세 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수입을 4.3조달러 증가시킬 전망 (최소 $3.65조 ~ 최대 $6.6조)

□ 법인세 인상(수입 1.8조달러 증가)

❍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

- TCJA(35%→21%)에 따른 세율 인하폭을 절반 복원하고 세원을 확대

❍ 대형법인의 장부상 이윤에 대해 15% 최소세 도입

❍ 해외발생무형자산소득세율을 10.5%에서 21%로 인상하고 전 세계 통합 기준(worldwide basis)이 아닌 국가별로 적용

❍ 적격사업소득공제(Qualified Business Asset Investments) 폐지

❍ 그 외 미국 기업이 외국계 자회사를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10%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외이전(offshoring)과 법인 이전(corporate inversion)을 막기 위한 공약도 발표

□ 개인소비세 인상(수입 1.4조달러 증가)

❍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여 TCJA 이전으로 복원

❍ 고소득자의 도관회사소득(pass-through income)에 대한 20% 공제를 폐지하고, 개별공제금액제한(Pease Limitation)을 복원

❍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개인과 부부의 양도차익과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39.6%로 인상

❍ 고소득자 사망 시 양도 차익에 대해 취득가액(stepped-up basis) 적용을 폐지하고 부동산동종거래(like kind exchange) 과세이연 제도를 폐지

❍ 항목별 공제 총 한도를 28%로 제한

□ 사회보장급여세 상한 인상(수입 9천억달러 증가)

❍ 최대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12.4%(절반은 사업주 부담, 절반은 근로자 부담)를 부과하는 사회보장세를 40만달러 이상에 대해서도 12.4% 부과

* 2020년 기준 13만 7천달러

• 최대 과세대상 소득이 임금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됨에 따라 비과세소득구간(donut hole)이 축소될 예정

□ 대형은행 금융위험수수료 도입(수입 1천억달러 증가)

❍ 자산 500억달러 초과 은행, 은행 지주회사, 비은행 금융기관에 금융위험 수수료(financial risk fee)를 부과

□ 납세협력(Tax Compliance) 개선(수입 1천억달러 증가)

❍ 매년 수천억달러의 세금이 소득 과소 신고, 과소 납부, 또는 신고누락으로 인해 징수되지 않고 있어 납세 협력을 개선하여 세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공약

* 추정세액과 징수세액 간 차이(tax gap): 2011~2013년 연평균 4,410억달러

❍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국세청(IRS) 보고 및 집행에 대한 자금조달 확대와 탈세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규칙 및 법령 개정이 포함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납세협력이 개선되어 수입이 1천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